



IFANS FOCUS

일련의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본 강대국 정치와 안보적 함의

반 길 주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비확산·국제안보연구센터장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중정상회담이 부산 회담, 베이징 회담에 이어 백악관 회담까지 진행된 상태다. 이러한 일련의 미중정상회담은 미중관계가 변화될 여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 공식과 시진핑 중국 대통령의 ‘안정’ 공식이 적절한 시점에서 절충된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미중관계는 ‘전략적’ 데탕트가 아닌 ‘전술적’ 데탕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중관계 변화는 구조적 변수와 행태적 변수 모두에 의해 추동된 것이지만 세력권전략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특이점 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련의 미중정상회담 분석을 통해서 1) 투키디데스 함정 본질, 2) 동맹구도, 3) 중견국 정치, 4) 북핵 해법에 대한 정책적·안보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포스트 트럼프 시기에도 전술적 데탕트가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유지,’ ‘복원,’ ‘절충’이라는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볼 수 있고, 이 시나리오 방향성은 물리적 역량 주도권 장악과 미국의 국내정치 지형이라는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1. 백악관 미중정상회담은 미중관계 변화의 서곡인가?

2026년 9월 23~25일간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워싱턴 D.C.를 찾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과 미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시진핑 주석의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방중에 대한 화답의 성격이었지만, ‘대등한 양국관계’라는 목표 달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국민방문인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미도 국민방문의 성격이 되어야 이러한 목표 달성에 부합하다는 판단으로 중국은 방문형식부터 미국과 외교적 심리전을 치열하게 전개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의 이러한 선행을 간파하고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국민방문으로 여건을 조성해주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앤드루스 합동기지(Joint Base Andrews)에 직접 나가 1시간 가량 대기하며 시진핑 주석을 맞았고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한 파격의전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파격의전은 중국에 요구하는 이익의 파이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한편 기대와 달리 중국측 기업인은 참석하지 않아서 미중 양국의 경제협력의 교두보로서의 기대이익은 조성되지 않았지만, 백악관 국민만찬에는 미국측 기술기업 CEO가 대거 참가하여 경제협력을 기대하는 모습은 연출되었다.

2026년 9월 백악관회담은 일종의 ‘거래’와 ‘안정’이라는 미국과 중국의 다른 선행이 적당한 지점에서 수렴된 결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도 특유의 거래기술이 중국을 상대로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현시하고자 했다. 특히 파격의전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만들어 낸다는 선행의 작동을 보여준다. 즉 미국의 파격의전으로 중국이 많은 선물보따리를 풀게 하려는 공식의 작동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을 통한 미국의 기대이익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최저인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고,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 환경을 구축하며, 미국의 대중 수출의 포문을 여는 기회로 활용 가능성으로 요약된다. 반면 중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정’을 화두로 중국이 미국과 동급 강대국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목표 차원에서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을 “역사적 의미를 지닌 이정표”로 규정하고 나섰고,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라는 담론을 미국이 정책적으로 공식화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시진핑 주석도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소위 “대국”을 강조했다. “투키디데스 함정” 담론을 베이징회담에 이어 다시 꺼내어 들었다.

목표와 선행이 다른 ‘거래’ 공식과 ‘안정’ 공식의 수렴은 무탈한 정상회담 진행을 가능하게 했지만, 국제적 주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경제전선에서 보면 각 국별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성 상품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인하에 무리 없이 합의하고 관세 전쟁 휴전을 2개월 연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안보전선에서도 이란전쟁, 러-우전쟁,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측의 기본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독립 반대”라는 입장을 미국이 채택하도록 주문하면서 “대만독립 미지시”라는 기존의 외교원칙을 흔들려는 포석을 내비쳤다.

2.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강대국 정치 어떻게 흐르고 있나?

미국이 보여준 파격의전은 동급 강대국으로 대우받기 위한 중국의 기대목표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어 미국의 반대급부를 챙기려는 의도된 행태로 평가된다. 실제로도 이번 정상회담은 국민방문 성격 등 곳곳에 동등성이 강조된 외교무대였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은 강대국 정치의 변화 양상을 판단하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미중관계 변화 조성으로 인한 강대국 정치 변화 환경

조성은 세력재배분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결과일까 아니면 전략변화라는 행태적 변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전자의 경우라면 이러한 기제가 지속될 개연성을 시사하고, 후자의 경우라면 미국의 국내정치지형이 변화되면 이런 기제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미중정상회담이 본질적으로 미중관계 변화를 조성하는지 가늠하려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정상회담을 포괄적 차원에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탄력을 받고 있는 미중정상회담은 <표 1>과 같이 1) 부산 회담, 2) 베이징 회담, 3) 백악관 회담을 거쳤고, APEC·G20 등 다자외교 계기 양자회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3차례의 회담은 성격, 숙제, 특징 비교를 통해서 양자관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경주 APEC정상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부산 미중정상회담(25.11월)은 레드라인 없는 관세전쟁으로 치달았던 미중대결에서 숨 고르기의 기회를 준 ‘관세 휴전’의 성격이 있었다. 중국의 희토류 강압에 사실상 반격카드가 없었던 미국이 관세 휴전을 통해서 응급처방격으로 위기관리 환경을 조성한 것이기에 휴전 지속 가능성이 숙제로 대두되었다. 부산 회담의 특징은 관세인하와 희토류 공급 재개를 맞교환한 것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으로 이루어진 베이징 미중정상회담(26.5월)은 일시적 휴전을 넘어서 미중 양국 간 전술적 수준의 데탕트 설계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논거는 미국이 제시한 ‘적절한 수준의 평화(Decent Peace)’와 중국이 꺼내든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가 유사한 지향점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전술적’ 데탕트가 ‘전략적’ 데탕트로 진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숙제도 남았다. 분명한 점은 ‘미중 디커플링,’ ‘미중 디리스팅,’ ‘미중 전략적 경쟁’과 같은 기존의 화두에서 벗어나 미중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조성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백악관 미중정상회담(26.9월)은 부산 회담과 베이징 회담에 이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파격적 변화가 있을지가 주목되었다. 하지만 그 성격은 베이징 회담의 반복에 가까웠고 실체적 회담이라기보다는 지도자 간 친분외교에 무게중심이 있었다. 관세 휴전이 연장되었지만 그 기간이 2개월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휴전연장의 성격에 그쳤다. 따라서 친분외교가 실체외교로 진화될지 여부와 양국의 정상외교가 제도화될지 여부가 숙제로 남게되었다. 한편 백악관 회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양국이 동일한 ‘시간기반전략’을 구사하면서도 그 의도는 상이한 특징도 확인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대응에 필요한 카드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간별기전략’을 구사했고,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하 미국을 대상으로 동급 강대국 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작은 선물보따리 제공으로도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시간끌기전략’을 구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 미중정상회담 경과

구분	부산 회담(25.11월)	베이징 회담(26.5월)	백악관 회담(26.9월)
성격	관세전쟁 휴전 (기한 : 26.11.10)	전술적 대탕트 설계 - 미 : Decent Peace - 중 :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	친분외교 (베이징회담 2.0) 상징적 휴전연장 (기한 : 27.1.10)
속제	휴전 지속 가능성	양국관계 전략적 수준 변화 가능성	정상외교 제도화 (실체외교로 진화)
특징	관세인하-희토류 공급 맞교환	미중관계 변화 모색 시도	시간기반 전략 - 미 : 시간별기 - 중 : 시간끌기
비고	- 중국 선전 APEC정상회의 계기 미중정상회담(26.11월) - 미국 마이애미 G20정상회의 계기 미중정상회담(26.12월)		

3. 정책적·안보적 함의는?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미중정상회담은 단지 양자관계 변화라는 시사점을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정책적·안보적 차원에서 1) 투키디데스 함정 본질, 2) 동맹구도, 3) 중견국 정치, 4) 북핵 해법에 시사점이 적지 않다.

첫째,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할 수 있다는 확신이기보다는 신흥강대국의 지위를 각인하기 위함이고, 이는 중국이 제시해 온 ‘신형국제관계’ 시대의 실체적 도래를 국제사회에 요구하기 위한 후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이러한 새로운 지위를 인정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분하여 외교적 강압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지형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에 이에 대한 치밀한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나아가 투키디데스 함정 언급에 숨겨진 의도에는 “전쟁 없는 패권 전이,” “전쟁 없는 대만 통일”도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되기에 군사력에 기대지 않고 외교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정책 1순위는 외교력을 통한 목표 달성이지만, 1순위 목표 달성이 불가할 경우 군사력이 포함된 2순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련의 미중정상회담을 통해서 강대국 타협정치가 가동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기존의 미국 동맹국을 중심으로 동맹구도 변화가 조성될 여지가 있다. 공식적으로 백악관은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의 무기판매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말이 흘러나온 바 있고, 2차 대전 언급을 통해서 일본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동맹국과 적성국의 차이가 역대 행정부와 대비해서 매우 느슨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의 양자동맹 구도와 유럽의 집단방위 구도 모두가 동맹 플랫폼 의존성을 완화하고 연대로 안보영역을 확장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다만 동맹구도 변화가 조성되더라도 미국과의 동맹 아키텍처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현실론과 맞물리면서 상당한 과도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강대국 정치가 강대국 타협정치로 변화되면서 국제정치 도전 해법을 위한 플랫폼의 확대의 환경이 조성되어 중견국 정치의 동력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 기존의 중견국 외교를 주도해온 캐나다·호주만으로는 중견국 정치 전격 가동은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과 같은 선진강국의 의지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도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적지 않다.

넷째, 백악관 미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북한 비핵화가 백악관 팩트시트나 중국 관영통신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북핵 대응과 해법에 한국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한국형 3축체제와 같은 자강 억제력을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이와 동시에 한미동맹 강화 접목될 수 있도록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작전화와 페이스메이커 역할 구체화 등과 같은 사안도 면밀하게 챙겨야 한다는 시사점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중관계 변화의 본질—구조 변화 혹은 행태 변화—을 통해서도 함의와 전망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트럼프의 ‘거래’와 시진핑의 ‘안정’ 간 맞교환 공식은 전술적 수준의 합일치 구도가 조성된 이상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말까지는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포스트 트럼프 시기에 이러한 미중 데탕트 기조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미중정상회담이 일회성을 넘어 제도화될 가능성까지 보이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 힘의 격차가 줄어드는 구조적 변수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변화라는 행태적 변수가 맞물린 결과다. 그럼에도 이 두 변수의 비중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미국은 군사력·기술력·경제력에서 부동의 1위이기에 구조적 변화가 종착지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데도 미국이 중국에게 국제적·전략적 지위를 추월당한 것처럼 비추어지는 행태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특이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특이점은 세력권전략을 통해 중국의 세력권을 일부 허용해줄 수 있다는 여지를 주고, 이번 백악관 회담을 통해서 “전략안정”이라는 중국을 담론을 무리 없이 수용한 것에서 도드라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최근 미중관계 변화는 구조적 변화를 넘어선 행태적 변수의 작동이라는 성격이 있다. 이를 염두에 두면 포스트 트럼프 시기 미중관계 전망은 <표 2>처럼 1) 유지, 2) 복원, 3) 절충의 3개 시나리오를 가늠해볼 수 있다. 첫째, ‘유지’ 시나리오는 포스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중 간 전술적

데탕트를 유지하는 경우로 이는 대결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두는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는 카드가 바로 마련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서 성급한 전략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려는 동기가 부상하는 상황을 담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내정치 지형이 변화하여도 중국의 ‘안정’ 담론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급 강대국 정치 공고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상황이다.

둘째, ‘복원’ 시나리오는 미중관계가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전략적 경쟁관계’로 복원되는 경우다. 미국이 세력권전략을 중단하고 기존의 패권전략으로 복원하면서 중국의 세력권을 허용하지 않고, 대중국전제에 군사영역도 다시 포함하면서 인도-태평양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이 강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우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서태평양 안보 기제에서 백악관과 전쟁부의 대응방향이 미동기화된 트럼프 행정부의 딜레마가 해결되어 정치적 목표와 군사적 목표의 일치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셋째, ‘절충’ 시나리오는 데탕트 시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외교적 소통의 노력은 이어가되 대중국전제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경우다. 어느 수준에서 절충될지는 향후 물리적 주도권을 누가 장악할지 여부가 따라 좌우될 것이다. 세력재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될지는 물리적 역량을 주도권 장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에서도 군사력·경제력·기술력 대결은 한층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2〉 포스트 트럼프 시기 미중관계 전망 시나리오

구분	내용	비고
시나리오 1 (유지)	전술적 데탕트 유지 (대결보다는 안정에 방점)	표면적 유사목표, 다른 셈법 - 미국 :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카드 구축 시간 확보 - 중국 : 미국의 정치권력 변화에 무관 동급 강대국 정치 가능토록 공고화
시나리오 2 (복원)	전략적 경쟁관계로 복원 (미 안보전략의 복원 : 패권전략)	미국의 전략 복귀, 중국의 중국몽 전략 지속 - 세력권전략 중단, 패권전략으로 복귀 - 군사영역도 대중국전제에 재포함 * 정치적 목표와 군사적 목표 동기화
시나리오 3 (절충)	외교적 소통 하 대중국전제 (디커플링 vs. 디리스팅 vs. 디블로킹)	변수 : 물리적 주도권 장악 여부 - 구조적 변수를 추동하는 세력재배분 상황이 절충 지점을 영향 - 물리적 역량의 주도권 장악 여부가 중요

상기 3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상황으로 귀결될지는 미국에 의해 추동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중국은 전략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고 반대로 미국은 변수의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국내정치 권력 지형 변화는 시나리오 트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차 MAGA를 지향하는 정부 출범 시 시나리오 1의 가능성이 높지만, 시나리오 3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미국의 제 역할 복원을 지향하는 정부 출범 시 시나리오 2의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변형시켜 시나리오 3으로 재설계할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경우든 시나리오 3이 공통분모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편집: 김 수 겸 연구원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서초2동 1376-2) 우)06750

www.knda.go.kr / www.ifans.go.kr

E-mail: research@mofa.go.kr

